

데스크 톱



조기철 부국감경 정치부장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러티브와 감성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장훈 감독이 추석을 앞두고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기적'은 기적같은 있지만 정작 기적이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기적'은 1988년 역명부터 대학살, 승강장까지 마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대한민국 최초 민자역 '양원역'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창조한 이야기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나가는 과정과 그 속에 담긴 각 인물들의 사연을 균형감 있게 담아내 경쾌한 웃음과 감동을 전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1위라는 기적을 이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시의회에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빛을 갚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를 임기 4년의 20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구민 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고 했다.

의원직 사퇴 배수진

의원직 사퇴가 차기 또는 차차기를 노린 '꼼수'가 아니라 내년 대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진정성 있는 승부수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그 효과가 경선 표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의 중도 사퇴로 호남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변화 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승부수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매우 불편한 심기다. 한국정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오로지 자신의 대권욕을 위해 내팽개쳤다는 점과, 의원직 사퇴선언 장소가 왜 하필 호남지역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고 180석 민주당을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자신의 정치적 윤희리에 따라

버리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도 나온다.

지금껏 국민들이 보기에 대선 경선은 매우 실망스럽다.

여당의 유력 주자들인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경선 초기부터 과도한 네거티브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에 매몰돼 경선이 실종되다시피 한 상태다. 호남과 수도권 등 아직 3분의 2가 남은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하고 네거티브가 남긴 상처를 추슬러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남은 경선 과정을 통해 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다시 집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인지, 'K양극화'로 명명될 만큼 더 심해진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청년과 서민을 분노케 하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꼼꼼히 따지는 시간이 돼야 한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슈퍼워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로 대세를 굳혔다. 이날까지 권리당원·대 의원을 대상으로 한 네 차례 지역 경선과 국민·일반당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1차 선거인단 투표(49만여 명)를 합산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41%를 확보, 31.08%를 얻은 이낙연 후보를 큰 표차이로 따돌렸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전해 득표율이 30%대로

올랐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는 흔들리지 않았다. 추격의 불씨를 마련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안방인 호남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제 이낙연 후보가 기밀 곳은 호남이다.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좁힌 뒤 정치적 기반이 강한 호남에서 역전하겠다는 각오다.

지역민 표심 향방은?

이낙연 후보는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 4선 의원을 지냈고, 전남지사를 역임한 만큼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호남 대선 공약은 사실 지역민에게 큰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추진 사업들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고비 때마다 호남에 손을 내밀었다. 그렇다면 호남경선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약 20만 명 누구를 지지할지가 관심이다. 당내 선거에서는 늘 호남에서의 향방이 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전략적 지지' 경향이 두드러지는 곳으로 이 전 대표가 1차 슈퍼워크에서 추격의 가능성을 보여 준 만큼 지지층이 결집해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된다. 그러나 호남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세론에 더 큰 힘을 실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도 호남지역민들이 선택의 키를 쥐고 있다. 과연 이 전 대표가 기적을 이뤄낼지 궁금하다.

사설 조대 의대 지역전형 비난만 해선 안 된다

조선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29명 중 38%인 49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대와 마찬가지로 지역인재전형을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광주와 전남 학생들의 의대 진 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전북대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때문이다.

조선대는 지역인재전형 범위를 전북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인재를 폭 넓게 구하는 차원으로 광주·전남 대입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에는 53%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대나 조선대나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전북으로까지 전형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무척이고 뭐고 할 일은 아니다. 지역인재육성

법에 따라 지역 범위를 최대치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대학들이 모두 권역 전체를 선발 범위를 잡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전북대만이 유일하게 대학 소재지에 한해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에 있는 원광대는 광주·전남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남대와 조선대를 타히기보다는 자기 대학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로 한정하는 전북대가 비판을 받는 게 더 합당하다.

일각에서는 조선대가 인재를 구한다 는 명분이 전북 자사고인 상산고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지적을 한다. 이런 이유가 포함된다면 지금까지 광주·전남 인재들이 전북과 수도권 자사고 또는 특목고로 가는데 지역 교육계는 뭐 했느냐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조선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대해 덮어놓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여수 경도관광단지 개발 의혹 해소돼야

세계적 휴양지를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이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청구까지 거론되며 안개 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더욱이 사업주체인 미래에셋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을 추진하면서 각종 의혹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항의 방안으로는 등 생활형숙박시설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국정감사 요구 결의안까지 발표하며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수시의회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문제, 정부의 연륙교 예비 타당성 통과 배경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여기에도 경도 레지던스 추진 배경 및 맞은 사업계획 변경, 투기문제 의혹까지 날날이 드러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경도개발 협약 당시 실제 전남개발공사와 계약한 주체가 YKD라는 신생 개발회사라는 사실이다. 여수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YKD는 미래에셋 컨설팅이 50% 지분을, 나머지는 외국계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을 비롯해 가족 관계인이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이며 외국계 회사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한다.

여수시민들은 신뢰받는 경도관광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도단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기고



곽미아 광주 남구 홍보기획팀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 지방재정법 제39조(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개정

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남구도 같은 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사업은 기초 자치단체(주민 참여예산), 광역 자치단체(시·도민 참여예산) 그리고 국가(국민 참여예산)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주요 장점으로는 생활 속 불편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예산의 적재·적소 사용, 그리고 주민맞춤형 정책 실현, 정책 과정의 투명성·민주성·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소통 및 주민 단합 등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매년 다음연도 예산 계획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공모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사업을 신청받고 동별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구청 예산부서로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사업은 구청 주무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현장 확인, 그리고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 적정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과제

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남구는 올해 구청 참여형(구 전체 또는 2개 동 이상 걸쳐있는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사업 등) 사업과 지역 참여형(마을 단위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 향상 사업) 사업, 그리고 동 지역회, 주무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2022년에 추진할 23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도 짧고, 주민 의식이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대부분은 구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활용 가능한 민원성 사업이 많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짧은 기간 동안 생각해 낸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주민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공모 기간인 3월 주민 9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기본 교육(예산학교 운영)을 실시했다. 5월에는 기본과정을 이수한 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모범사례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동영상을 남구청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교육과 참여 활성화, 그리고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심 있는 주민들이 동별 지역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업을 제안하고 싶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관, 사내 보안 규정 제정, 관련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건상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입고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들은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 자신들의 영업비밀 보호에 세심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인 창조경제총서 공공정보경비계 경정

특지광장

지난 6월 대기업 화장품 연구개발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같은 계열업체의 화장품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 5년 형이 구형되는 등 국내에서 매년 영업비밀 유출로 피해보는 금액이 4~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퇴직이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은 대기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힘써야

업에 비해 매우 취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가치성)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일컫는다.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판례를 볼 때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비밀관리성'이 가장 중요하다.

비밀관리성에 대해 입증하려면 해당 정보·기술 등에 비밀임을 표시해 별도 보

대규모 참사를 책임지는 기업의 자세

기지수첩

2014년 2월 17일 밤 9시경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리조트 대강당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던 부산외대 학생 500여 명의 운명은 불과 10여 분 뒤 산산조각났다. 폭설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진 것이다. 사망 10명에 부상 100여 명. 천재지변과 부실공사, 안전불감증이라는 최악의 삼박자로 인한 참사였다.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가족에게도 앞뒤려 사죄한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세력부터 기업 총수가 달려와 사죄하고 구조 지원과 보상을 약속하자 사태는 악화되지 않았다. 여론도 비난보다는 생존자 구조와 부상자 쾌유를 바라는 쪽으로 형성됐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1인당 5억 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기업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는 게 당연한 데도, 모범적인 대처의 선례로 꼽힐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경주 리조트 사고는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닮았다.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철거)가 원인이란 점, 죄없는 이들이 희생당했다는



오선우 사회부 기자

점에서다. 명백히 다른 것은 기업의 대처다. 학동 철거 공사의 원정인 현대산업개발(HDC)의 대처는 코오롱그룹과는 판판이다. 실수를 인정하거나 책임지지도 않았으며, 꼬리자르기식 재판과 말뿐인 보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지금이라도 HDC는 원인 규명과 경찰 조사,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피해자 보상과 지원도 마찬가지다. 반성과 속죄만이 이 땅에 터를 잡고 국민의 힘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책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작금의 행태로 당장 허물을 감추고 돈을 아끼려는 몰라도 결국 기업 이미지 실추로 더 큰 손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 참사를 나몰라라 했던 기업의 운명이 어땠던가. 삼풍백화점과 함께 몰락했던 삼풍건설산업의 비참한 말로가 단적인 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and medical help.

Table with 2 columns: 1989년 6월 29일 창간 and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단).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